



21세기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김 용 응 (충남발전연구원 원장)

- 이 글은 2004년 10월 13일 천안대학교 법정부
학술제 특강자료를 발췌요약한 것임 -

강의목적과 개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쟁 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만이 난무했고, 전문가의 논의도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돼 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 목적이 수도권 과밀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주장하나, 나는 신행정수도건설이 보다 큰 뜻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목적이 공간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만 있다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추진할만한 국정과제라 할 수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에선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메가트렌드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효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의 한계와 메가 트렌드의 변화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이래 산업화를 통해서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1962년 우리나라 전체 GNP가 23억불이었는데 지금은 4,500억불로 198배가 증가했습니다. 1인당 GNP는 1962년에는 87불이었는데 1997년에는 1만불로 112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의 한계가 왔습니다. 30여년이상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던 나라가 갑자기 한계에 도달한 것은 내부적 성장 잠재력의 한계와 함께 거시적 여건 변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메가 트렌드는 크게 3 가지 차원에서 변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생산시스템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번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산확대가 가능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대량소비가 가능한 경제-사회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대량소비 시스템의 핵심은 생산과정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가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서구 선진국에서 높은 임금인상으로 생산성이 악화되어 더 이상 확대 재생산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홍콩, 대만, 한국 등의 저임금 상품들이 몰려들면서 서구의 제조업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탈산업화 현상과 함께 경제구조는 급격히 서비스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혁신과 정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전개되면서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었습니다. 모든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에 치중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쟁력과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기술혁신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대량생산시스템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잘 팔리는 물건도 내일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화제품의 대량생산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업조직이 점차 작아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여건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생산시스템을 유연화하는 데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과 컴퓨터의 등장은 유연적 생산시스템 도입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규모 기업도 고유의 경쟁력을 지니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혁신, 시장 불확실성의 증대는 기업투자의 위험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요즘 기업들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투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핵심적인 전략이 기업별로 특화된 핵심역량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업이나 조직에 의존하는 협력적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네트워크 경제 시스템이 대두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혁신을 촉진하고 다른 기업 및 조직과 협력생산이 가장 유리한 지역을 찾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지역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집적과 클러스터 형성이 대부분 나라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의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는 자금, 상품, 기업들의 생산이 지구적인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계화는 관세장벽으로서의 국경의 의미와 국가의 규제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가간 특성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자기만이 지닐 수 있는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노력의 하나가 고유의 전통과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차별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로 생산요소의 이동은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동이 불가능한 지역적 요소(regional factors)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가 전개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Andrew Mair(1991) 같은 학자는 이를 가리켜 세방화(glocalization)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메가 트렌드의 대두로 그동안 정부주도형 요소투입형 양적 생산과 단핵구조의 국가경제성장 정책은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

기술혁신과 경제의 세계화로 점차 심화되는 국가 간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양적 생산 체제를 혁신주도형 지식기반경제체제로의 전환하는 것입니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정책, 인력개발정책, 사회자본 확충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한 전략이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에 있어 기술이나 기업의 역량 외에 지역적 요소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경제시스템을 분권화된 지역경제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지역은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차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프랑스 및 유럽연합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경제시스템을 자율적인 지역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자율적 지역경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구의 대부분국가에서는 경제규모를

지닌 지역경제단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현재 22개 레지옹을 8-9 개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지역경제권의 형성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국가에서는 분권형 지역경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지역경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는 경제의 세계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도시(global city)조성전략입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생산활동의 확산과 함께 금융, 기술개발, 업무 등 부가가치가 큰 중추통제기능이 세계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화시대 국가경쟁에 있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세계도시지역 육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런던과 파리를 지역정책 수준에서 다루지 않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치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동북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동경, 상하이 등이 세계도시 위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 대표적인 화두는 "세계속에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혁신역량을 높여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입니다.

혁신지향적 지식기반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다양한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 인적자원개발정책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입니다.

둘째, 중앙정부 주도의 국가경제 시스템 대신에 지역의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한 분권형 지역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핵구조의 국가경제 시스템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됐습니다. 차별화된 다핵구조의 지역경제시스템의 구축만이 살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창의와 자율성의 확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을 지역주도의 경제정책으로 바꾸고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온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정부의 정책의 지나 제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지방분권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

다.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험해 온 것입니다.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이양은 정부 주도의 인식, 관행, 문화가 함께 변하지 않고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나라가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을 세계도시지역으로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세계도시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밀과 집중의 폐해에서 벗어나야 하고, 지역정책 차원의 규제가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의 규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발전 전략적 의의

신행정수도건설은 단순히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만을 위한 공간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메가트랜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국



개발전전략 패러다임을 실현시키는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권형 지역경제시스템의 구축에 필수적인 분권화를 촉진하는 수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를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서울과 중앙정부 중심의 인식, 관행 및 문화를 바꾸는 기능을 하여 분권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선도적 시책의 성격을 지닙니다. 자율적인 지역경제시스템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신행정수도 건설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분권형의 자율적 경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주체들이 자신감을 지니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가능합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지역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부외지를 보장하는 상징사업이며 실천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한 두 가지의 정책수단 만으로는 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합적인 생활 및 기업여건이 갖추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분권화와 함께 공공기관이전, 지역혁신발전전략, 낙후지역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으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시책은 지역불균형의 원인인 수도권의 권력집중을 해소하지 못했고, 정부에서 채택한 시책수단이 공간정책 수단에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최소한도 지금까지의 공간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범정부적 시책에 바탕을 둔 국가전략으로서 위상과 성격을

지니고 추진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민소득 2만불 수준의 선진국으로의 진입이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는 분권화를 촉진하고 지역의 자율의지를 높여 자주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선도정책과 함께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필수적 조건인 세계도시지역의 육성을 촉진하는 핵심정책의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은 서울과 수도권 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이 세계도시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과밀, 혼잡과 지역 정책적 규제에 덮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 이루어지면 수도권에서 향후 30여년간 100여만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것으로 집중과 과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신행정수도 건설 외의 어떠한 수단도 이정도의 효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권을 국내의 지역정책 차원의 규제에 덮에서 해방시켜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수도권과 지방간에는 한 지역의 성장과 번영이 다른 지역의 쇠퇴로 이어지는 제로섬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과 규제의 합리화는 지역불균형과 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관계를 상생발전의 계기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현재 신행정수도건설을 전제로 6000여만평에 달하는 경제특구 조성사업이 추

진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없이 신행정수도의 3배에 달하는 국제물류, 교역, 업무도시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 수도권의 집중과밀의 심화와 함께 지역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신행정수도건설이 가시화되면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global city region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하여 수도권의 반대가 크다고 하나 이 같은 국가 전략적 의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지역불균형 상태 속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함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단순한 공간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1만불의 뒷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권형의 지역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세계도시지역 조성이 필요한가? 신행정수도건설은 이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수단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신행정수도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 기여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주장의 허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주장은 현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운 지금 45조원이 필요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같은 주장은 경제원리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경기의 문제이고, 행정수도 건설은 앞으로 2035년까지 추진하는 초 장기적인 투자사업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정책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자간에는 정책의 성격이 다르고 투자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에 쓸 돈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현재 경제침체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투자와 소비의 부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본이 없어 경제성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투자와 소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적 상식이 있다면 경기침체를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수도 건설을 투자 차원에서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의 수도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이후의 수도문제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란 개연성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미래 전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국가정책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현재의 시점

진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없이 신행정수도의 3배에 달하는 국제물류, 교역, 업무도시를 수도권에 조성하는 경우 수도권의 집중과밀의 심화와 함께 지역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제 신행정수도건설이 가시화되면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global city region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신행정수도의 건설에 대하여 수도권의 반대가 크다고 하나 이 같은 국가 전략적 의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신행정수도 건설을 적극 지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지역불균형 상태 속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없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함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과밀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단순한 공간정책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국민 소득 1만불의 뒷에서 벗어나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권형의 지역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세계도시지역 조성이 필요한가? 신행정수도건설은 이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수단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가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인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전략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추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한 것처럼 신행정수도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에 기여하는 필수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주장의 허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주장은 현재는 신행정수도건설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경제가 어려운 지금 45조원이 필요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같은 주장은 경제원리와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처방이 요구되는 경기의 문제이고, 행정수도 건설은 앞으로 2035년까지 추진하는 초 장기적인 투자사업입니다.

서로 대립하는 정책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양자간에는 정책의 성격이 다르고 투자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에 쓸 돈을 신행정수도 건설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현재 경제침체의 원인이 자본의 부족이 아니라 투자와 소비의 부족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자본이 없어 경제성장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투자와 소비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적 상식이 있다면 경기침체를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수도 건설을 투자 차원에서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의 수도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이후의 수도문제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일이란 개연성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미래 전망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할 국가정책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현재의 시점



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장 필요한 일을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변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생존전략이고,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모든 것을 유예하고 기다리기에는 국가간 경쟁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한편 통일에 대하여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베를린 장벽처럼 갑작스럽게 북한이 붕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500만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우 과밀과 혼란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북한인구를 분담할 수 있는 지역의 거점을 키우고 수도권의 비만을 줄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상호 평화적인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정치형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치형태가 되더라도 분권형의 지역경제시스템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적 연방 형태를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강력한 단일 통치거점인 수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북한과 남한에 각각의 통치거점이 있을 수 있고, 제3의 통치거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독일에서는 수도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어 있고, 네덜란드도 암스텔담, 헤이그 등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민족적 대치구조에서 벗어나 화해를 촉진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은 정부의

역할들이 굉장히 축소되고 수도의 의미가 변하고 있는 시점이므로 통일이후 수도입지 때문에 신행정수도건설을 반대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신행정수도 건설에 너무 많은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약 45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67조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면 보다 정확한 투자비 추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의 추산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투자비가 45조원이든 67조원이든 큰 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800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 규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5조원이라면 우리나라 1년 GDP의 6%에 정도이고 이 것도 1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간 쓰는 겁니다. 매년 투자수요는 GDP의 0.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977년도 백지계획을 만들었을 때 투자비는 5조 6,000억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것은 그 당시 17조원에 달하는 GDP의 3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지금은 국가경제규모 차원에서 예전 투자비의 1/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직접 쓰는 돈 11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골고루 쓴다고 해도 1년에 1조원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예산은 그만두고 도로특별회계만 봐도 1년에 16조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년 약 5% 정도만 절약해도 조달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건설투자비를 근거로 반대논리를 펴는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가전략의 우선순위 차원

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논의의 지평을 넓혀야

오늘 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점차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국가발전전략이 무엇인지?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 같은 국가발전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을 이야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의 찬반 논의는 공간정책 차원에서 너무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국가적 대의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하고 종합적인 국가발전전략 패키지 차원에서 효과를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만을 떼어 놓고 효과를 논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권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 시책개선, 국가균형발전 및 동북아 중심지 육성 시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국가전략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를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신행정수도의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국가발전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정책을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현안의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21세기 국가생존과 발전, 번영,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전략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갖추어야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소모적인 찬반논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행정수도건설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가 제 각각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와 분권화, 국가균형발전, 수도권시책, 동북아 중심 육성시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효율적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말과 의도는 좋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과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는 주장이 보다 성숙된 국민의 자세이고 민주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젊은 학생들도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세를 지녔으면 합니다.

제 강의를 통하여 시대적인 변화의 속성과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국가전략 방향을 생각하고, 신행정수도의 필요성, 효과 및 실현 가능성도 국가발전의 틀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